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화요일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재활용할 종이, 박스,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분리해서 내놓는다. 여러 가구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작은 동산을 이룬 것을 볼 때마다 가느다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이용하던 신선식품 배송 업체는 식품을 제각기 다른 박스에 담아 배송한다. 박스를 줄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배송 업체를 바꾸었다. 새 배송 업체는 주문 식품을 재활용 비닐박스에 넣어 배송하고 다음 배송 때 수거해 간다. 따로 비닐 박스가 없으니 그만큼 분리수거의 필요를 덜어 주는 것이다.

지구의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의 배출량도 늘어난다. 자연을 가공하는 문명과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손에서 설계와 제작을 거쳐 나온 물건은 본디 쓰임을 다하고 폐기될 때 쓰레기로 돌아간다. 쓰레기란 인간의 관조에서 효용가치가 다한 자연이다. 인간이 생산과 창조 활동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산의 이면에 가려진 비밀이고, 그 처리는 인간이 풀어야 할 영구적 난제 중 하나다. 산업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에 생각한 것들

쓰레기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쓰레기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누군가에겐 쓰레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쓰레기는 그 용도를 미처 찾지 못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쓰레기는 매혹과 혐오라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쓰레기는 모든 창조와 산파인 동시에 지극히 가공할 만한 장애물이다”라고 말한다.

지구 인구가 10억 명이 되는 데 20만 년이 필요했지만, 70억 명이 되는 데는 불과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는 자연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과부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구 자원을 제 마음대로 퍼 쓰는 인류의 번성은 반대로 지구 생태계에는 미증유의 재앙일 테다.

인류는 육류와 동물성 제품을 얻으려고 680억 마리의 가축을 사육한다. 가축 사육에 어마어마한 곡물을 쓰고, 울창한 숲을 목초지로 바꾸며, 인간이 쓰는 담수 3분의 1을 쏟아붓는다. 축산업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의 18퍼센트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로 이루어진 온실가스는 기후 재난의 주요 원인이다.

지구는 지난 세기보다 더 자주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초강력 태풍이 오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잦은 가뭄과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대기와 해양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간다. 사하라 사막에 난데없는 폭설이 내리고, 페루 바닷가는 죽은 정어리 떼로 뒤덮인다. 말할

라야 산백의 빙하가 강으로 떨어져 나온 뒤 홍수를 일으켜 인근의 수력발전소 댐을 붕괴시키고 마을을 휩쓴다. 이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기후 재난은 지구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우리가 날씨가’에서 “기후변화는 재깍거리는 시한폭탄이다”라고 경고한다. 우리 안에 퍼진 ‘무관심 편향’은 기후 재난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시작점이다.

오늘 태어난 아기에겐 ‘지구라는 초록별에 온 걸 축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인류는 미래세대에게 생태적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 깨끗한 대지와 공기는 미래세대가 누릴 것을 빌려 쓰는 셈이다.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땅에 묻혀 썩는다. 하지만 잉여의 쓰레기는 늘 골칫덩이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양에서 섬을 이루고 떠돈다.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탄소발자국을 줄이자고 한다. 그것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인간 사회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초유기체, 즉 하나의 덩어리다. 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의 문제는 결국 한 사람의 문제다.

인류가 현재 수준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면 지구는 곧 쓰레기로 뒤덮일 테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 각자가 생태적 각성과 더불어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윤리적 실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社說

5·18 암매장 의혹 풀 중요한 단서 나왔다

1980년 5·18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암매장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암매장 사체처리반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주일보가 조사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가매장됐던 희생자들을 따로 처리하는 ‘사체처리반’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과거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보안사가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안사 사체처리반 요원들은 가매장을 했던 당시 진압군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가매장했던 진압군을 찾아 ‘보고했던 사체 수가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는 희생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암매장했는지 가능성을 말해 준다.

정부가 인정한 5·18 당시 행방불명자는 84명이지만 신고된 인원은 448명에 달해 5·18 진상규명 차원에서 실제적 진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보안사와 특전사의 사체처리반 운용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몇몇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사체처리반이 암매장된 희생자들을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밀리에 화장했는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사체처리반 운용 확인과 요원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계기로 암매장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당시 보안사)와 국가정보원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행히 두 기관에 사체처리반 운용 관련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전남에 반드시 유치해야

우리나라 섬의 65%(2165개)가 전남 지역에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자치단체는 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들여 왔다.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제1회 섬의 날(8월 8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도 주도해 왔다.

정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균형 발전, 입지 여건, 섬 발전 정책 사업과 연관성 및 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설립 부지를 정한 뒤 오는 8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섬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도가 ‘섬진흥원’ 유치에 적극 나선 이이다. 사실 정부의 ‘섬진흥원’ 공모에는 아쉬

운 감이 없지 않다. 전남도가 이미 정부에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도는 2015년부터 ‘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 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모를 결정하면서 이제 경남·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를 선언해 전남 유치를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원점으로 회귀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갖은 노력을 해야 한다. 유치 전략에서도 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제·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제조 생산유발 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도가 ‘섬진흥원’ 유치에 적극 나선 이이다. 사실 정부의 ‘섬진흥원’ 공모에는 아쉬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 사망한 직원은 열아홉 살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 사건은 숨진 청년의 소지품에서 점심으로 먹은 커피면이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쓴소리를 내뿔었고, 서울 지하철 관계자들은 그 책임에 따라 직위 해체되거나 사표가 수리되는 등 파장이 컸다. 비정규직에 대한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 듯 잊히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도 그렇다. 생전 모습이 사진 속에서 아직도 생생한 김용균 씨는 사망 당시 스물네 살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소지품에서 또한 먹지 못한 커피면이 발견되었다. 이 사망 사건의 파장도 매우 커 태안 지역 경제가 침체될 정도였다. ‘이제는 변화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약속과 함께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이 또한 흐려진 것만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두 청년들의 죽음은 진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지난 1월 흑독한 한파가 몰아치던 때, 유촌동 광주전변 다리 밑 굴터에서 한 분의 노숙인이 일어 죽었다. 갑작스런 노숙인의 죽음으로 광주시는 물론 지역구청과 시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종합적 전수 조사와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는 노숙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두 곳이나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누가 죽어야 사람들이 놀라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계속되는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숙인의 죽음 또한 설 명절을 지낸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내놓은 대책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구의역 청년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노숙인의 죽음은 잇따라 파장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잠 슬프다.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관료제를 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이 무서운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저 하나의 이용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존재인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 같은 일들이 허다하다. 예수 시대의 기득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으로 사람들을 옥죄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았고 안식일과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기득권 안에 숨겨진 것은 항상 돈과 같은 재물이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약직이라는 규정은 고용자들에게 있어서 팔단지와 같다. 언제든 내칠 수 있기에 그렇다. 계약직에 속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족쇄를 채워 사지로 떠미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은 많은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는 부라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자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주님의 종’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말씀이다. 누가 죽어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여러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고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의 절박한 당위성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향세 법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채 사실상 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심초사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농업계는 국회가 더 이상 고향세 법안을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등 정치권·지방의회·농업계 등에서도 하루빨리 고향세를 도입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받은 재원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복지·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지역 공동화·완화는 물론 특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이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 고향세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 담례품 과다 지출, 세수 손실을 보게 되는 대도시의 반대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담례품 상한 제한 등 꾸준한 제도 보완을 통해 고향세는 이제 소멸의 시대에 지역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고향세가 도입된 2008년(81억 엔)과 비교하면 규모는 45배, 건수는 무려 320배나 급증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안에서도 예상을 훨씬 넘는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다른 결과는 도료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고향 납세 유치 금액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이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향세가 대도

시와 지역이 같이 상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물론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대도시의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 상상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통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예와 같이 농어촌의 소멸을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고향세 도입이 가져오는 지역적·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차적 효과(지역특산품 제공 등) 외에 인적 교류의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고향세 재원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향토산업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면초가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동력이 필요하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와 전국 지자체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농업계의 바람인 고향세 도입을 신속히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無等鼓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 재앙이 발생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본능이었다. 먼저 부정한 것을 저질러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닌지, 조상을 욕되게 하거나 묘를 돌보지 않아 동티가 난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했다. 임금이나 지도자들은 자신의 덕이 부족해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가뭄에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지진이 나면 해괴제(解災祭)를 지내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곧잘 정치와 연결하곤 했다. recent 근거가 없을지라도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등의 말을 내뿔으며 경계의 도구로 삼았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재해는 모두가 근신하되 주변을 잘 살펴, 피해를 함께 이겨 내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웃인 일본은 똑같은 재앙에도 이를 대하는 자세가 어찌 그리 다르고 공격적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일본의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인이나 흑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가짜 뉴스

가 확산했다고 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진 발생 다음 날 “이번 강진을 둘러싸고 또다시 차별적인 발언과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유튜브 등에 난무했다. 재해 때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가짜 뉴스는 지난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흉내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동대지진 때에는 57만 가구의 집이 소실됐고 사망자·행방불자도 40만 명에 달했다.

일본은 민심이 흉흉해지자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일본 정

부와 우익 단체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조선인을 마구 체포·구타·학살했다. 당시 조선인 사망자는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나라 국민보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일본 국민이 지진 발생 이후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제국주의의 향수를 잊지 못한 탓일까?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남 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